

국가전력으로서의 항공모함 확보조건 분석

반길주*

I. 서론

II. 항공모함 확보조건(분석의 틀)

III. 사례추적 1 : 균형적 전력으로서 항모 보유 국가

1. 미국(유형 : PM I)
2. 중국(유형 : PM III → I)
3. 유럽 주도국가 : 영국·프랑스(PM II)
4. 일본(PM I → PM II)
5. 터키(PM IV → PM II)

IV. 사례추적 2 : 불균형 전력속성의 항모 보유 국가

1. 인도(PM III)
2. 태국(PM IV)
3. 이탈리아(PM II → PM IV)
4. 러시아(PM I → PM III → PM II/IV)

V. 결론 : 정책적 함의

* 대한민국 해군 속초함 함장.

I. 서론

항공모함(이하 항모)은 국가 핵심자산으로 기능하는 국가모함일까 아니면 큰 임무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행정모함일까? 어느 국가가 항모를 국가모함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에서는 항모가 행정모함으로 전락되는 전력의 낙오자 신세가 되는가? 즉 어느 조건이 항모를 유효한 전력으로 기능케 해주는가? 이에 대한 답을 추적하는 것은 과거 시행착오 분석, 현재에 대한 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구비하게 해주어 미래 국가전략-특히 군사전략-및 전력기획의 적실성을 높여 준다는 측면에서 항모 관련 검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항모는 현대 해군전력의 총화로 손꼽힌다. 그 임무도 전면전에서부터 전쟁역지, 평화유지 및 재해·재난구호까지 그야말로 해상의 카멜레온이라 할 정도로 다양하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연이어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안보가 요동칠 때 안보전문가와 언론들은 USS *John C. Stennis* 항모의 한반도 파견소식을 앞다투어 언급했다.¹⁾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항모의 강력한 현시효과 때문이었다. 전력운용이 국제정치적으로도 연계가 된다는 측면에서 항모의 운용군이 해군이라고 해군전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항모를 전술플랫폼 정도로 보는 것과 다르없다. 사실 항모는 국가전력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또한 그런 방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항모가 외교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항모 확보·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모는 그 국가의 경제력과 균형을 맞추어 확보될 수밖에 없다. 한편 경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전력기획 및 수세적 안보정책으로 그 강건한 경제를 지속시켜 주는 데 핵심전력인 항모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국가는 경제빈국임에도 강한 해군력 건설을 추구하는 거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힘과 해군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해군력 건설시 국가의 힘과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국제정치환경 그리고 그 국가가 직면한 위협이다. 요약하면 해군력은 그 국가의 경제력 및

1) “美 ‘전략무기 5중세트’ 한반도 출격… 대북 압박 ‘최고조,’” 『한국경제』 (2016.2.18.), p.2.

위협분석을 근간으로 하여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군력이 국가의 수준과 불균형적이거나 위협수준을 미흡하게 분석하여 건설된다면 경제성장의 적신호를 초래할 단초를 제공하거나 심지어는 안보위기에 봉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추적하여 전력기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력건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국제정치 및 경제와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전력건설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항모는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상징적 측면에서도 국가위상의 정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에게 항모는 유효하고 적절한 전력이며 어느 국가에게는 보유 자체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항모 보유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인가? 이 퍼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첫째, 항모가 아닌 다른 분야에 국가자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에서 체계적인 전력기획 부재하에 무리하게 확보를 추진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하시키거나 자산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항모 보유의 필요충분조건을 가진 국가가 이를 거부하여 국가이익과 위상을 해치는 전략적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 전력건설기획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항모 확보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II. 항공모함 확보조건(분석의 틀)

항모 확보 가능조건을 식별하는 것은 국제정치, 국내정치, 경제력, 국방정책, 임무판단 등 다양한 변수가 역학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쉬운 과정이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다고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수를 대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다. 대변수로 살펴보면 항모 보유는 크게 경제와 임무라는 두 변수로 연관지어 분석해 볼 수 있다. 항모는 강한 경제력과 군사적 임무소요의 절실함이 없으면 확보·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모 확보 및 운용을 위해서는 경제력·국가위상과 위협·임무수준을 고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국가 전반에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경제력(국가위상)과 위협(임무)라는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불충분하면 항모는 국가급 전력의 총화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행정모함으로 퇴화되고 만다. 반대로

경제력(국가위상)과 위협(임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충족하지만 無항모 원칙을 고수한다면 국가위상과 국가안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의 후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과 위협수준이라는 두 변수를 통해 어느 국가에게 항모 운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항모가 균형적 자산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항모라는 전력이 단순 군사이익을 넘어 국가의 포괄적 이익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항모가 불균형 자산이라는 것은 국가경제력 및 임무소요 대비 무리한 확보로 ‘비용 vs. 효과’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국 국가재원의 효과적 운용에 저해요소가 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 정의한다.

항모 확보조건에의 적실성 있는 분석을 위해 부국(강대국) 여부는 국제사회에서 해당국가의 위치, 즉 국가위상과 경제력을 연관지어 생각해야만 한다. 한 국가의 GDP는 높지만 국가의 규모가 도시국가 수준이라면 그 국가의 경제력은 국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해당국가의 경제력이 국제안보를 견인하는 요소로 전환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제력 변수는 국가위상을 인식한 가운데 분석되는 변수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P변수(national Prestige)라 정하고 조작화를 위해 GDP를 기반으로 한 경제력 지표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활용한다.

한편 임무라는 변수는 해당국가와 직접 관련되는 임무와 국제사회라는 공동의 임무와 관련되는 임무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런 임무는 결국 해당국이 직면한 위협 및 국제안보 환경에서 창출되는 위협과 관련이 된다. 위협이 있기에 임무소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M변수(Mission)로 지정하고 위협과 임무를 조작화의 대상으로 한다.

〈그림 1〉 항공모함 확보조건 유형이론

		P변수(국가위상 · 경제수준)	
		부국(강대국)	빈국(약소국)
M변수 (위협 · 임무)	고강도	I(전력구조 : 균형) ○(항공모함)	III(전력구조 : 불균형) X(항공바지)
	저강도	II(전력구조 : 준균형) △(항모 : 특화된 규모)	IV(전력구조 : 극단적 불균형) X(행정모함)

P(국가위상·경제수준)와 M(위협·임무)라는 독립변수는 항모 확보조건-필요수준-이라는 종속변수를 4가지 결과-PM I, II, III, IV-로 유도한다. 그림 1에서 “PM I” 유형은 경제수준이 높고 임무소요도 명확하여 항모전력이 국가지위와 균형을 이루어 항모 운용의 필요충분조건을 구비한 경우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국가는 항모 보유가 군사적 임무소요 해결의 핵심전력일 뿐만 아니라 부강한 경제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케 해준다. 또한 항모를 본래의 운용개념에 부합되게 활용하므로 항모 운용 지속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항모대국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항모를 운용하는 미국이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반대로 “PM I”에 해당되지만 항모 보유를 꺼리거나 무관심하면 국가지위에 부합하는 전력의 미비로 균형을 잃게 되어 국가이익과 안보측면에서 큰 해가 될 수 있다.

“PM II” 유형은 경제적으로는 항모 확보가 가능한 국가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항모 투입 필요의 임무강도가 낮거나 임무가 불확실한 경우의 국가에 해당된다. 이 경우 국가가 보유한 항모는 국가지위와 균형을 이루지만 완전하지는 않는 전력이라 할 수 있다. “PM II” 국가는 항모를 보유했다라도 저강도 임무소요로 인해 장기전략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져 지속운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모 보유 자체가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기능은 어느 정도 가동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국가는 강한 경제력 덕분에 첨단항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임무소요가 많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 항모전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최소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항모를 자신의 임무수준에 부합되게 특화시켜 운용하고 있는 유럽국가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고정익 항공기를 탑재하여 항모 운용의 선두국가로 자리를 잡았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회전익 항공기 및 수직이착륙기를 운용하는 경항모로 축소한 후 현재 일시적으로나마 항모를 1척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PM III” 유형은 경제적으로 항모 확보가 가능한 국가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민경제도 열악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경제규모에 있는 타국가에 비해 항모투입 임무소요가 많은 국가에 해당된다. “PM III” 국가가 항모를 보유하면 항모는 국가지위와 불균형적인 전력으로 퇴화될 수 있다. “PM III” 국가의 항모는 불충분한 경제자산하에 확보되었기에 첨단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노후된 항모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막대한 유지비

가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경제가 피폐한 상태에서 항모를 지속적으로 정상 운용하는 것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정 임무소요가 있어 무리하게나마 항모를 도입했지만 완전성이 떨어지는 항모 보유로 인해 결국 작전효과도 떨어지고 임무도 흐지부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무리한 항모 확보로 인해 빈약한 경제력을 극복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항모가 애물단지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 중국과 같은 국가위협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현시전력을 확보하고자 노후항모라도 도입했지만 도입 당시 배경과 임무에 부합되도록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 인도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PM IV” 유형은 경제적으로 항모 확보가 가능한 국가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민경제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임무소요나 전략적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항모를 보유한 국가의 경우이다. “PM IV”의 경우 항모는 국가지위와 극단적으로 불균형화된 전력으로 실제전력이라기보다는 거품전력에 불과하여 국가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경제력도 빈약하고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모를 운용하고 있는 태국과 브라질이 이에 해당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PM I” 및 “PM II” 유형은 항모가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기능하는 경우이고 “PM III” 및 “PM IV”는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Ⅲ. 사례추적 1 : 균형적 전력으로서 항모 보유 국가

1. 미국(유형 : PM I)

미국은 항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국가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초대형 항모를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²⁾ 항모의 기술력은 변화하여

2) 미국이 보유한 9~10만 톤급은 초대형 항모, 7만 5천 톤급은 대형항모, 영국의 차기항모인 6만 톤급은 중형항모, 인도 항모와 같은 4만 톤급은 소형항모, 이탈리아 항모와 같은 2만 톤급은 경항모로 분류된다. 강영오, “한국형 항모 확보와 운용 및 무기체계 탑재방안,” 『전투발전연구』 제20호, p.18.; 허성필, 장진오,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확보 현황 및 전망,” 『주간국방논단』 제1564호 (2015), p.2. 단, 배수톤수만을 갖고 항모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4만 톤급 항모는 핵으로 추진되며, 캐터펄트(항공기 발진장치)와 3개의 구속장치(착함제동장치)까지 구비하여 정규항모 수준의 함재기 운용이 가능하므로 기능 및 임무수준 측면

왔지만 미국의 군사임무에는 항상 항모가 함께해 왔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국은 미 해군 최초의 항모인 *USS Langley*(CV 1) 등 약 40여 척을 운용하였다.³⁾ 전후 미국은 내부적으로 항모 축소라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점차 양적 측면에서 규모를 감소시키기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은 ‘제독들의 반란’과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모위상 강화 거부라는 국가 내부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임무소요라는 강력한 추동변수에 의해 질적 능력 신장으로 전력건설 방향을 전환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항모 확보가 공세적으로 추진되었다.⁴⁾ 1955년 미국은 전략핵무기가 탑재된 최초의 항모인 *USS Forestal*(CVA 59)을 본격적으로 운용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1961년에는 최초의 원자력 추진 항모인 *USS Enterprise*(CVN 65)를 취역시켰다. 현재 미국은 1975년 취역한 *USS Nimitz*(CVN 68), 2009년 취역한 *USS George H. W. Bush*(CVN 77) 등 10척의 항모를 전 세계 바다에서 운용하고 있다.⁵⁾ 또한 2척의 신형항모-*USS Gerald R. Ford*(CVN 78), *USS John F. Kennedy*(CVN 79)-를 건조 중이다. 일부 항모기능이 있는 초대형 상륙강습함까지 고려하면 항모 규모는 더 막강하다.⁶⁾

미국은 항모를 국가자산의 균형적 전력으로 잘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PM I’ 유형에 해당된다. 미국에게 항모는 2차 대전 승리의 주역이자 냉전시 소련 견제의 핵심전력이었으며 현재도 세계 질서 유지의 선도국가 역할에 초대형 항모(supercarrier)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PM I’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인가? 먼저 P변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위상과 경제력 모두에서 강국 및 부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우선 항모는 미국의 국가위상과 부합한 균형전력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에서 소형항모가 아닌 중형항모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U.S. Department of the Navy, <http://www.navy.mil>(검색일: 2016.2.23)

4) 미해군 항공력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제독들의 반란’은 J.G. Barlow 저, 윤영식 제독 (옮김), 『제독들의 반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군항공을 위한 투쟁』(서울: 랜드앤마린, 2011) 참고.

5) 미국은 2016년 *USS Gerald R. Ford*(제럴드 포드함)이 전력화되면 다시 11척 체제를 갖추게 된다. *Asia-Pacific Rebalance 2025*, CSIS, January 2016, p.126. ; 2009년 건조에 착수한 제럴드 포드함은 니미즈급 항모를 대체하는 함정이지만 수명주기 동안 필요한 총소유비용이 니미즈급보다 40억 달러나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강국 미국조차 경제적 전력확보를 우선시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방기술품질원,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Gerald R. Ford*함의 비행갑판 설치 완료,” 『Global Defense News』 제709호(2013.4.19), p.5.

6) 예를 들면 현재 건조 중인 초대형 상륙강습함 ‘트리폴리함(LHA 7)’이 전력화되면 F-35B를 탑재시켜 서태평양 해역에 2017년 후반기에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니 항모전단’으로도 불리고 있다. “미 ‘기동항모전단’ 창설 태평양 배치,” 『동아일보』 (2016.5.4), p.5.

을 기점으로 영국으로부터 패권국의 지위를 물려받아 세계주도국가가 되었다. 이 시기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성장하였음을 인식하고 더 이상 국가의 위상에 부합되지 않게 미주대륙 내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41년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서게 된다. 2차대전 후에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양극체제를 이끈 국가였고 냉전에서 소련을 붕괴시키면서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 국가위상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오히려 이러한 국가위상을 가진 미국에게 항모가 없다면 지위를 지탱할 균형자산이 없는 불완전한 전력구조인 셈이다.

미국은 경제력 측면에서도 부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냉전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당대 강국보다도 높은 1인당 GDP를 구가하여 왔다. 1970년 미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GDP(약 3,200불)와 영국의 GDP(약 3,700불)보다 훨씬 높은 5,200불이었다.⁷⁾ 현재는 그 격차가 더 커져 2014년 기준 영국은 40,000불, 일본은 3만 6천불인 반면 미국은 54,000불에 이르렀다. 물론 이 국가들의 GDP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음 ‘M변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다양한 위협에 직면했고 수많은 임무가 뒤따랐다. 우선 2차대전 시 추축국-독일, 이탈리아, 일본-위협이 있었고 냉전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의 위협이 있었다. 이는 주권적 위협이자 국제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이었다. 국가적 수준의 위협이 제거된 탈냉전기에도 위협은 지속으로 부상하였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알카에다라는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본토 공격을 받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비국가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현 시점에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도 위협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위협의 부상 및 상승된 국가위상이라는 안보환경은 미국에게 보다 많은 임무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였다. 통상 국가의 내부성장-특히 경제력 성장-은 국가의 외부적 활동 강화를 추동시키는데 미국이 이 메커니즘의 최적 대상국가였다. 국제무대에서도 수없이 많은 안보임무 수요가 창출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의 주도국가 지위에 있었기에 임무를 도맡아 수행해야 하는 환경에 있었다. 특히 이 임무의 중심에 항모가 있었다. 2차 대전 중에는

7)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 지표로 OECD data인 최종 재화와 용역에 수입을 뺀 비용인 시장가 GDP를 사용하며, 대상국에 대한 객관적 비교를 위해 현 물가와 구매력에 기반한 1인당 GDP를 동일 지표로 사용한다. <http://www.oecd.org>(검색일: 2016.4.15).

태평양 전쟁이 대표적인 임무소요였다.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국제무대 역할 강화를 위해 미 해군의 전력구조를 기존의 거함거포주의에서 항모주의로 전환시켜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전후에는 중국 공산화, 양극시대 소련 등장, 6·25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지역 안보불안 등의 안보변수가 창출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질서 주도 행위자의 임무가 증대되고 있었고, 이 임무에는 항모가 항상 함께하여 왔다.

사실 이런 안보문제의 주도적 해결 없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는 연결구조 속에서 항모는 더욱 진가를 발휘했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제일 먼저 달려간 전장인 한반도에서 항모는 북한공군의 무력화를 견인하며 제공권 장악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는 해상통제권 장악으로 이어졌다. 냉전기 미 항모는 소련의 해양통제를 제압하는 핵심자산으로 기능하면서 양극시대 한 축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걸프전 등 중동지역에서 창출된 군사임무 소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전력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미국은 1991년 걸프전에 USS *John F. Kennedy* 등 6척 항모의 파병으로 압도적인 항공력을 투사하여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조기에 철수시켰다. 1996년 대만 위기시에도 항모의 현시작전은 통했다. 중국을 퇴각시킴으로써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주역이 항모였던 것이다.

현재도 항모는 국제안보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지속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가 여전히 국제안보의 위해요소인 상황에서 항모는 본토 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탄 발사 도발 감행 시 억제 및 군사력 현시차원에서 미국은 항모를 급파하여 연합훈련을 수행한다. 항모는 중국처럼 미국에 본격 도전하는 국가적 행위자를 견제하기도 한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대상에 미 항모가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항모의 위세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위협을 흡수하는 역할 외에도 미국은 재해·재난작전에도 항모를 투입하면서 국가급 다목적 지원함으로써 활용하여 왔다. 항모는 수많은 항공기와 물자탑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구호작전에도 그 효과가 뛰어나다. 미국은 2010년 아이티 지진구호, 2013년 필리핀 태풍구호 등의 임무에 항모를 투입하여 국제무대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인도적 지원작전이 국제사회의 주도국가로서의 위상유지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게 항모는 국가이익을 시너지적으로 보장하는 균형적 전력인 셈이다.

미국이 항모를 통해 국제정치 및 국제안보의 선도국으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모만이 변함없는 정답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전력구조의 변화에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미해군 전력의 가장 큰 약점은 항모를 비롯하여 대형함 위주로 편성되어 해상계틸라와 같은 비국가행위자 대응작전, 아시아 연안에 있는 동맹국과의 해상협력, 연안위주의 작전에 있어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⁸⁾ 그렇다고 이 주장이 항모와 같은 국가주력함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항모를 통해 국가행위자의 위협에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기에 다음단계로 공백의 소지가 있는 다른 안보영역에 대한 보완을 하려는 움직임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항모는 자국의 이익에 시너지효과를 견인하는 균형전력이라 할 수 있다.⁹⁾

2. 중국(유형 : PM Ⅲ → I)

중국의 항모 보유는 30년을 내다본 전략과 전력기획의 대표적 사례이다. 30년 후 국가의 모습을 생각하며 통치한 덩샤오핑 주석과 30년 후 세계주도국가가 된 중국을 힘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구상한 유화칭 제독의 합작품이 항모인 셈이다.¹⁰⁾ 덩샤오핑 주석은 기존의 통치노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라는 기치하에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설계하여 내놓으며 중국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개혁개방’ 정책의 대성공으로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 빈국이라는 과거와 결별한다. 중국이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며 일본도 추월한 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무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제질서를 관장하는 미국에 순응하며 내적 힘을 키우는 데 성공한 결과로도 볼 수

8) 미국에서도 학자들 사이에 이와 같은 논의가 진지하게 시작되고 있다. 예를 들어 William M. Beasley는 “현재 대형함 위주로 되어 있는 미 해군의 전력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형함정 추가 건조를 통해 균형함대를 만들면 동아시아에서 해상통제를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William M. Beasley Jr, “Closing the Presence GAP,” *PROCEEDINGS*, Vol.141, No. 11(November 2015), pp.52-58.

9) 항모가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기능한 미국, 영국, 일본의 전간기 항모 발전에 대한 분석은 박성용, “전간기 영국, 미국, 일본의 항공모함 발전에 관한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7권(2011년 8월), pp.171-201 참고.

10) 유화칭 제독은 1982년~1988년까지 중국 해군사령관으로 재직할 후, 1989년~1997년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하였다.

있다. 하지만 힘이 성장한 국가는 내부지향적에서 외부지향적 모습으로 그 행태를 변화시키기 마련이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거부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30년 전에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국가정책을 힘으로 지원하는 군사력의 핵심으로 항모를 구상했던 인물이 유화칭 제독이다. 유제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연안방어에서 벗어나는 ‘근해해군’ 개념을 도입하면서 ‘열도선 전략 (islands chain)’을 미래안보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하였고 항모는 이때부터 태동하고 있었다.¹¹⁾ 유화칭 제독의 항모 확보에 대한 구상은 1988년 중·베트남 남사군도 해상충돌과 1996년 대만해협 위기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된다. 항모없이 미국에 대항할 수도 세계의 주도국이 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최소 항모 4척이 필요함을 주장하기에 이른다.¹²⁾ 그러면서 1985년 호주 퇴역항모 펠버튼함, 1993년 구소련 항모 키에프함 및 민스크함을 구입하여 항모 건조 및 운용 노후우 습득에 본격 착수한다.

이러한 전략구상과 끈질긴 항모 노후우 습득의 결과 1998년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바랴그함을 개조하여 2012년 중국의 최초 항모인 6만 톤급 랴오닝함을 취역하게 된다. 경제대국을 추진한 덩샤오핑과 군사대국을 추진한 유화칭의 노선이 시너지적 효과를 이룬 것이다. 경제력이 부강한 국가는 세계의 주도국이 될 수밖에 없고 실효적 주도국이 되려면 군사력 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식한 지도자의 혜안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현재는 5~8만 톤급 국산 항모 2척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J-15 함재기 외에도 J-31 개발도 추진 중이다.¹³⁾

중국에게 항모는 임무측면에서 1980년 말~1990년 중반시기부터 상당히 필요한 자산이었다.¹⁴⁾ 하지만 당시 중국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빈국이었고 국가전체 경제측면에서도 성장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이었다. 따라서 당장 항모를 확보한다면 국가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경제력 성

11) 이홍표 편저, 『중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안보』(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p.109.

12) “군사대국’ 야욕 中國, 항공모함 보유 임박,” 『프리존뉴스』(2006.11.27. <http://www.chogabje.com> (검색일: 2016.4.21).

13) 중국의 2번째 항모이자 국산건조 최초의 항모는 50,000톤급으로 2016년 말 진수를 추진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재준, “중국 2번째 항공모함 올해 하반기 진수 전망,” 『NEWSIS』(2016.1.5), <http://www.newsis.com>(검색일: 2016.4.15).

14) 중국의 항모 확보 추진 궤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박병광,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대한 소고: 지정학과 군사과학기술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7권 제4호(2011년 겨울), pp.173-202 참고.

장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전력 확보를 추진하여 결국 2010년대에 '경제력과 임무소요-즉 PM 변수' 모두를 충족한 시점에 항모전력을 작전배치하게 된다. 1980년대 말에 확보되었다면 앞서 제시한 분석모델에서 'PM III'에 해당되어 항모가 불균형 국가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시기를 조절하여 경제력과 국가위상이 갖추어진 후에 항모를 배치함으로써 이 플랫폼을 균형적 국가자산, 즉 'PM I' 유형이 되도록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 'PM'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히 중국의 항모 확보조건을 따져보기로 하자. 우선 P변수를 살펴보자. 먼저 국가위상 측면에서 중국은 강국의 모습을 견지하여 왔다. 우선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위치에 있다.¹⁵⁾ 냉전시기에는 미국과 소련 간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양국 모두를 활용하는 외교로 이익을 극대화하며 국가위상을 지켜왔다. 현재 중국은 소련이 사라진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대항마로 조금씩 부상하고 있고 이를 방증하듯 G-2시대의 국가로 전 세계에 인식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은 국가위상 측면에서 항모 보유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할 수 있다.¹⁶⁾

경제력 측면을 살펴보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198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300달러로 당시 약 12,000불이던 미국 GDP의 1/40분의 수준에 불과했고 OECD 평균(약 9,000불)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빈국이었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정책이 조금씩 결실을 보면서 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2015년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불로 미국(54,000불)의 1/4 수준까지 추격했다. 미국의 1/4 수준이지만 중국의 인구는 약 13억 명으로 세계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한 만한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즉, 13억 인구 개개인이 13,000불의 돈을 쓸 수 있는 경제력이라는 점에서 민생경제가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1인당 GDP가 아닌 국가 전체의 생산능력에서 살펴보면 2015년 명목기준 GDP에서 중국(약 11조 달러)은 미국(약 18조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며 구매력 기준에서는 미국도 추월한 세계 1위의 GDP를 보유한 국가이다. 이러한 경제력은 항모 보유의 충분조건을 견인하고 있다.

15) 허성필 박사와 장진오 박사도 국가위상과 항모 보유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대국으로서의 위신" 차원에서라도 항모 필요를 인식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허성필, 장진오(2015), p.5.

16) 국가위상과 항모 운용은 단방향 관계는 아니다. 국력이 높아짐에 따라 항모를 확보하면 이 때문에 국력이 더 성장하고 국가위상도 강화되는 쌍방향 관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쌍방향 관계에 인식을 둔 글은 정철호, "중국, 국력 신장 위해 태평양 진출," 『Chindia Journal』, (2015.7), pp.25-27.

중국은 냉전시기 위상측면에서는 항모 확보가 요구되었지만 경제력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항모 운용이 가능한 부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국가위상도 냉전시기보다 더 높아짐으로써 항모전력이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안착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M변수'를 분석해보자.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국토면적을 보유한 국가로 많은 국가와 접경하고 있어 위협노출 강도가 세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남서방향으로는 인도 및 파키스탄과 서측으로는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 북동방향으로는 러시아, 몽골 및 북한과 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약 3만 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바다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위협 외에도 사상과 관련한 위협도 지속하여 왔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냉전기 민주진영과 첨예한 대결을 하여왔다.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사상과 철학의 대립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협은 중국으로 하여금 많은 군사임무소요를 창출케 했다. 우선 중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큰 규모의 전쟁 중 하나로 분류되는 6·25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사상적 대립의 결과로 분리된 대만과의 통일도 '하나된 통일(One China)' 국가정책하에 군사적 임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다. 특히 중국이 대만문제를 타 국가들이 간섭할 수 없는 국내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6년 대만해협 위기에서 미국에 패배했다는 쓰라린 경험은 항모 확보라는 과제를 현실화시켜 주는 촉매제가 되었다. 또한 인도도 견제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분쟁 중인 일본도 강력한 견제의 대상이다.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를 두고 분쟁 중인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해양통제 쟁탈전도 중요한 임무소요이다. 중국은 G-2국가이자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위상을 점하고 있는 위세에 편승하여 미국과 태평양을 분할통치하고자 하는 야심도 내비치며 미국의 해양접근을 차단하는 임무를 국가이익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살펴본 위협을 흡수하고 다양한 임무를 원활히 달성하는 데 항모가 매우 효과적 자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소련이 냉전에서 패배하여 국제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중국은 소련을 대신하고자 하는 야심을 비쳐왔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패권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패권도전국가(a revisionist state)로 위상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항모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¹⁷⁾ 고속 경제성장에 자신감을

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 가능한 국가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미국의 항모를 견제할 전력이 부재했기에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동평-21D(DF-21D)’, ‘동평-26D(DF-26)’ 등 지대함미사일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¹⁸⁾ 또한 은밀공격이 가능한 093B 핵잠수함 등을 실전배치하여 미 항모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작전을 구사해 왔다.¹⁹⁾

한편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작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해역에서의 군사임무 소요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미 해군은 2015년 USS *Lassen*(DDG-82)을 남중국해 수비 산호초 12해리 이내로 진입시킨 데 이어 2016년 5월에는 USS *William P. Lawrence*(DDG-110)를 피어리 크로스 암초 12해리 이내로 진입시켰다.²⁰⁾ 이 사건은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거부를 군사적 임무수준까지 상향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중국의 항모작전 활용극대화 필요성에 논리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²¹⁾ 이처럼 군사전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5월 중국은 미 항모 전단의 홍콩 입항을 거부하였다. 이는 첫 번째 항모를 확보한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력 균형화에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의미도 있다.²²⁾

이처럼 최근 남중국해가 중국의 국가이익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장기항해 및 지속적 항공초계가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항모의 가치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에서 최대 900km까지 이격되어 있어 육상발전 항공기의 작전지속효과는 매우 낮기 때문에 항모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²³⁾

17) 중국의 정책입안자는 미국에 대항하는 유효한 전력 중 하나로 항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분석했다. *Asia-Pacific Rebalance 2025*, CSIS, January 2016, p.15.

18) 동평-21D의 사거리는 1,500km, 동평-26의 사거리는 3,00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항공모함 전성시대 막내리기 시작,” 『연합뉴스』 (2016.2.23), <http://www.yonhapnews.com>(검색일: 2016.2.23).

19) “중국, 최신형 핵잠수함 실전 배치,” 『세계일보』 (2016.2.29), p.5.

20) “영유권 헤이그 판결 앞두고 美·中 남중국해 양동작전,” 『국민일보』 (2016.5.12), p.8.

21) 남중국해의 군사작전지역화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016년 4월 7일 중국 인민해방군해군은 함대의 8개 항공병사단을 동원하여 돌격성 전투훈련을 벌였고, 미국은 당해역에 무인잠수정 배치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美·中 군사작전 지역으로 돌변,” 『서울신문』 (2016.4.19), p.19.

22) “美항모, 홍콩 오지마!... 中, 9년만에 입항 거부,” 『동아일보』 (2016.5.2), p.21.

23) *Jane's Defense Weekly*, January 29, 2016, <http://www.janes.com>(검색일: 2016.4.22) 특히 본 저널은 칭화대 추 슈롱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2015년 10월 미 해군이 USS *Lassen*(DDG-82) 함을 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중 하나인 수비 산호초(Subu Reef) 12해리 내에 진입시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 이후 중국의 지도부가 항모의 남중국해 배치 필요성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의 해양이익 확장과 같은 임무수행은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군사 현대화를 통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와 맥을 같이 하듯 중국은 경제성장과 임무발생 수요를 염두에 두고 3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항모 확보를 추진하였다. 경제성장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에게 미국의 태평양 접근 차단이라는 것은 이전과 달리 실행 가능한 임무로 부각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신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진핑 주석의 ‘주동작위(主動作爲)’ 정책과 일치한다.²⁴⁾ 중국은 미국의 중국 근해 접근 차단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형대국 중국의 ‘주도성’을 구현해 줄 균형전력이 바로 항모인 것이다. 중국은 구소련 항모를 도입 후 개조하여 최초의 항모인 랴오닝함을 전력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탄력을 받은 중국은 현재 자국기술로 항모를 건조하고 있으며 총 6척의 항모 확보를 목표로 전력증강을 추진 중이다.²⁵⁾ 심지어 2020년경 핵항모 확보전망까지 나오고 있다.²⁶⁾ 중국의 항모 전력화는 국가위상 및 경제력이라는 변수와 위협인식 및 임무소요라는 변수가 접점에서 만난 필연적 결과이었던 것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항모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3. 유럽 주도국가 : 영국 · 프랑스(PM II)

유럽은 경제력과 임무소요 모두를 고려하면 미국과 같은 항모를 지속 보유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항모를 보유하면 항모가 국가급 플랫폼으로서 균형적 전력이지만 완전성은 떨어지는 불완전 균형전력이 되고 이는 결국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에 이익보다는 해가 될 개연성이 높다. 무리한 항모 운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치명적 해를 입은 대표적 사례가 바로 구소련이다. 구소련은 내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

24) ‘주동작위’는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시진핑 주석의 철학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문구라 할 수 있다.

25) Eric Wertheim, “World navies in review,” *PROCEEDINGS*, Vol. 141, No. 12(March 2016), p. 51.

26) “중국 해양굴기... 세계 잇는 ‘진주목걸이 바닷길’ 완성 나섰다,” 『한국일보』 (2016.4.25), p.17.

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 팽창을 위해 무리하게 군사력을 증강시켜 몰락을 자초하였으며 구소련이 보유했던 항모는 행정모함 신세가 된 후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 팔려 러시아 국가재건에 사용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구소련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항모를 지속 보유하는 방법은 숫자와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유럽과 같은 국가들은 항모를 보유하되 국가적 차원의 균형전력으로서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항모의 보유수를 최소화하고 항모급수도 낮추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는 다른 독자적 방안으로 대형항모 대신 중·소형급으로 항모를 운용하여 국가급 균형전력으로서의 완전성을 높여왔다. 더욱이 유럽은 주권위협에 대응하는 고강도 임무가 거의 없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일정 안보 몫을 담당하는 저강도 수준의 임무가 주로 있다는 점에서 임무소요도 미국, 중국과는 차별화된다. 항모 확보조건을 유형모델로 분석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부국이면서 군사임무의 강도는 낮은 'PM II'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두 국가가 임무를 과대포장하여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항모를 대형화하고 보유척수도 늘려 유형모델 'PM I'의 길을 걸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에 봉착했을 것이다.

영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항모를 운용한 국가이다. 1918년 취역한 HMS *Argus*함은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평평한 갑판을 갖춘 세계 최초의 함정이었다. 영국은 이 함정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까지 운용하였다. 이 시기 영국은 세계패권국이었다. 하지만 세계패권국의 지위를 미국에 넘겨준 후 경제력도 부진해지자 1960~70년대에 기존 보유 정규항모를 단계적으로 퇴역시킨 후 1980년대부터 단거리 이륙 및 수직착함이 가능한 시 헤리어형 경항모를 운용하게 된다. 이 시기 영국은 항모운용조건에서 'PM I'에서 'PM II' 국가로 변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력의 퇴화라기보다는 경제력 수준과 임무환경에 맞추어 특화시킨 항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규모를 외면하고 관성적으로 기존의 대형항모를 지속 추진하였다면 국가 전체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며, 나아가 항모 미보유 국가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이었다 할 수 있다. 헤리어 기반 경항모 1번함은 1980년 취역한 22,000톤급 HMS *Invincible*이었으며 운용 효과가 입증된 후 1982년에 HMS *Illustrious*, 1985년에 HMS *Ark Royal*을 취역시켜 3척 운용체제를 갖추게 된다. 1959년 정규항모로 취역했으나 상륙강습함으로 개조된 후 1981년 시 헤리어 기반 경항모의 시제함격으로 전환된 HMS

*Hermes*는 1986년 인도해군에 매각된다. 1980년대부터 경항모 3척 체제를 유지하던 영국은 1990년부터 차기항모구상에 들어갔으나 높은 획득비와 경제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차기항모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항모 1번함은 2005년, 3번함은 2011년, 2번함은 2014년에 퇴역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영국은 일시적으로나마 항모를 한 척도 보유하지 못한 국가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STOVL형인 차기항모 1번함인 65,000톤급 *HMS Queen Elizabeth*가 건조된 후 전력화과정을 거치고 있다.²⁷⁾ 함수에 13도의 스키점프대가 설치된 이 항모는 F-35B Lightning II 항공기를 주력기로 하여 치누크, 아파치 등의 탑재도 가능하다. 특히 5일 동안 F-35B 전투기를 420회 출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²⁸⁾ 2번함인 *HMS Prince of Wales* 건조도 추진 중이다.²⁹⁾

그러면 영국의 항모 확보조건을 앞서 제시한 유형이론으로 분석해보자. ‘P 변수’ 측면에서 먼저 영국의 국가위상은 미국에게 패권의 지위를 넘겨준 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은 패권국이었으며 패권의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주로 해양력을 활용했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 영국은 세계에서 항모를 가장 먼저 구상하고 건조한 국가가 된다. 2차 대전 이후에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EU의 핵심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에 다른 EU 국가들은 강력히 반대하며 탈퇴를 저지하기 위해 영국에게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국제적 위상은 대영제국 시절과는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이다.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에 밀려 변방의 국가신세가 되었고, 탈냉전기에는 중국에 밀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러시아의 서진을 혼자 막는 것이 어려워 EU 및 NATO에 의지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일시적으로나마 영국이 항모를 한 척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낮아진 국제적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영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G7(Group of 7) 국가라는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등 아직 상당한 위상을 가진 국가임은 사실이고 최소 지도적

27) 영국해군 홈페이지, <http://www.royalnavy.mod.uk>(검색일: 2016.4.13).

28) 홍현수, “영국의 Queen Elizabeth급 항공모함,” 『국방과학기술정보』 통권 47호(2014), p.117.

29) 영국의 차기항모는 50년의 수명연한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항모의 높은 획득비용을 고려하여 한번 획득한 후 최대한 장기간 사용하려는 기획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항모 확보 및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여 해당 플랫폼이 균형적 국가자산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홍현수 (2014), pp.116-119.

위치에 있는 중견국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력을 살펴보자. 정규항모를 퇴역시키고 경항모 도입을 추진했던 1970년대 영국의 경제력은 초대형 항모 운용국가인 미국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1975년 영국의 1인당 GDP는 약 5,500달러로 미국의 GDP 7,800달러에 많이 못 미치는 규모로 경제패권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OECD 평균 GDP(5,400불) 및 일본의 GDP(약 5,100달러)와 유사한 규모이었기에 항모 전면폐기 검토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를 고려하면 정규항모 대신 경항모를 확보 추진하는 것은 전력기획의 합리적 선택이었던 셈이다. 현 영국의 경제력은 임무소요만 따라준다면 적절한 항모 운용이 가능한 규모이다. 2014년 기준 영국의 1인당 GDP는 약 40,000불로 일본(약 36,000불)보다 높으며 OECD 평균(39,000불)보다 높다.

‘M변수’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위협판단에서 영국은 2차 대전 후 독일과 같은 타국가로부터의 주권적 위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주권적 위협이 거의 없고 더욱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영국은 1982년 2월 HMS *Invincible*을 호주에 매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주권적 위협에 대항하는 거의 유일한 군사임무인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한다. 포클랜드는 남대서양 아르헨티나 동부해역에 위치한 섬으로 1833년부터 영국령 하에 있던 섬이다. 하지만 영유권을 주장한 아르헨티나가 1982년 4월 2일 포클랜드를 무력점령하자 영국은 이를 주권위협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이 전쟁을 계기로 HMS *Invincible*함의 매각은 취소되고, HMS *Hermes*함과 함께 포클랜드로 향하게 된다.

이 전쟁에서 항모는 그 위력을 발휘한다. 영국은 2척의 항모를 주축으로 하여 임무부대(Task Force)를 투입하여 해상통제권을 장악하고 아르헨티나 본토까지 항공타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 후 포클랜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75일 만인 6월 14일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경제력이 위축되었지만 항모 운용을 폐지하는 대신 경항모로 전력인프라를 재편한 전략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영국은 패권지위를 미국에 넘겨준 이후로 국제안보 역할에서 다소 변방에 머무르면서 세계로부터 위협도 미국처럼 다양하지도 많지도 않았다. 위협의 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셈이다. 위협의 강도가 높지 않은 만큼 군사임무 소요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고 그것도 저강도 군사임무 위주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규항모 운용에 대한 지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

접적 주권위협은 없더라도 유럽의 주도국임에는 분명하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기에 공동의 안보를 위한 임무는 지속하고 있어 왔다. 영국은 1991년 걸프전, 2002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및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미국과 함께 참가하여 국제안보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항모 유형의 변경을 통해 항모를 준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지속 운용하는 전력기획을 추진했다 할 수 있다.

영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유럽의 핵심국가라는 위상과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력을 고려하면 항모 보유가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임무소요가 있는가이다. 영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안보에 최인접 조력자로서 역할을 주문받고 있으며 이런 역할 수행 없이 영국 자신의 국가이익 보장도 어렵다. 탈탈냉전기인 현재도 영국에게 항모는 임무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국가자산이다. 우선 항모는 9·11테러 이후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테러분자라는 비국가행위자의 중동 점령에 대응하기 위해 절실한 자산이다. 나아가 항모는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러시아의 서진을 차단하는 역할로도 필요한 플랫폼이다. 이로 인해 군사임무 소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바다로 둘러싸인 섬국가인 영국에게 해군력은 이와 같은 군사임무의 핵심자산일 수밖에 없다. 특히 해군력 중 항모는 활용적 가치가 가장 높은 자산이다.

따라서 임무측면에서도 항모가 필요하지만 임무강도와 빈도를 고려하면 미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까지는 필요없다. 영국의 입장에서 항모는 보유하되 수준조절이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여건분석이 차기항모로 중급형 2척 보유라는 정책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영국형 항모는 'PM II' 유형처럼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2번함 건조템포는 경제력 및 임무소요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하에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과 함께 유럽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프랑스도 항모를 국가전력으로 잘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1년에 *Clemenceau*(클레멘스함), 1963년에 *Foch*(포슈함)을 취역시켜 CATOBAR³⁰⁾형 항모를 약 30~40년간 국가모함으로 운용하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 경제력 어려움에 직면한 후 클레멘스함을 1997년에 퇴역시키고 포슈함을 2000년에 브라질에 매각한 후 후속항모로 *Charles de Gaulle*/샤를 드골함(R91) 1척만 2001년에 취역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는 과도하지도 또한 과소하지도 않은 비용으로 항모를 운용하기 위해 2

30) CATOBAR: Catapult Assisted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캐터펄트/구속장치 장착).

번 항모 확보계획은 2013년에 취소하였다. 따라서 2번 항모 건조계획이 탄력을 받기 전까지 프랑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항모 한 척만을 운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여건을 고려하여 부실한 항모 수척보다 제대로 된 항모 한 척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측면이 있다. 샤를 드골함은 42,000톤급 핵추진 항모로 유럽형 다목적 전투기인 라팔(Rafale)을 비롯하여 E-2C 호크아이, 헬기 등 최대 40여 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로 프랑스의 경제력과 임무소요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프랑스의 항모 확보조건을 살펴보자. ‘PM’ 유형이론으로 판단해보면 프랑스는 경제력은 높지만 임무강도는 높지 않은 ‘PM II’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우선 ‘P 변수’ 측면에서 프랑스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지위를 보유한 유럽 2개 국가 중 하나이다. EU에서 경제나 안보이슈를 주도하는 핵심국가이다. 2016년 4월 23일 북한이 SLBM을 동해상에 발사한 직후 프랑스는 EU에 추가제재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다.³¹⁾ 나아가 G7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자이다. 이런 위상은 항모 확보의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경제력 측면에서도 유럽의 주도국가이다. 2척의 항모를 적극 운용하던 1970년 당시 프랑스의 1인당 GDP는 약 3,700불로 OECD 국가 평균(약 3,500불)을 약간 상회하였고 영국 GDP(약 3,700불)와 비슷한 규모를 자랑하였다. 현재 한 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2014년 기준 GDP는 39,000불로 여전히 영국(약 40,000불)과 비슷한 규모이다. 이는 OECD 평균(약 39,000불)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보다는 약 4,000불 이상 높은 GDP 규모이다. 경제력 역시 항모 운용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위상과 경제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적절한 항모 보유수준 판단을 위해서는 위협·임무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M변수’를 분석해 보면 우선 프랑스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강도가 높지 않다. 사실 현재 프랑스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주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 시 독일처럼 프랑스라는 국가전체를 위협하는 적성국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러시아가 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2차 대전 시 독일의 위협과는 거리가 멀고 이러한 위협도 NATO나 EU를 통해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대응한다. 프랑스가 자국의 색깔을 잃지 않고 미국과 일정거

31) “프랑스, EU에 ‘SLBM 발사 북한 추가제재 요청,’” 『KBS NEWS』, <http://news.kbs.co.kr>(검색일: 2016.4.25).

리를 유지하기 위해 NATO 가입을 꺼리고 있으면서도, 옅저버 자격은 고수하는 것은 NATO에 거는 안보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위협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군사임무 강도도 높지도 그리도 빈번하지도 않다. 미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가 필요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경제력 측면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국가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라는 안방에만 머무를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공동안보와 관련된 임무는 지속 창출되어 왔다. 이런 임무소요는 프랑스를 다른 유럽국가보다 첨단군사력으로 더 무장케 하는 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프랑스는 2001년 미국 주도의 항구적 자유작전(Operation Enduring Freedom)에 참가하였다. 특히 항모도 큰 활약을 하였는데 샤를 드골함은 2001년 11월 인도양에 도착한 후 700소터 이상의 정찰기 및 전투기 출격을 통해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유럽 주도국가의 면모를 과시하였다.³²⁾ 2002년 인도-파키스탄 위기를 시는 아라비아해에 항모를 파견 후 미해군과 전투초계작전을 실시하여 라팔 항모함재기의 작전운용성능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2011년 동 항모는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구역('the no-fly zone over Libya')과 관련한 UN 안보리 결의안 시행을 위해 지중해에 파견되어 국제적 수준의 군사임무에 동참했다.³³⁾ 샤를 드골함은 IS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5년 1월과 11월에 중동지역에 파견되기도 하였다.³⁴⁾ 특히 2015년 11월 샤를 드골함 파견에 힘입어 12월에 실시된 IS 테러조직 와해 작전인 'Operation Inherent Resolve'에 프랑스 해군제독이 연합작전 해상지휘관-Task Force 50-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³⁵⁾

이처럼 부국 프랑스에 요구되는 임무소요는 지속되고 있지만 항모 2척 체제로의 전환은 아직 꺼리고 있다. 임무소요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쇠퇴로 인한 재정압박에 직면한 프랑스는 항모를 균형전력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2척 대신 1척 운용을 선택한 것이다. 아직 부국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현실 그리고 급박하지 않은 임무수준을 고려하여 프랑스에 최적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중형항모 한 척 체제인 것이다.

32) Francois Guenet, "Charles de Gaulle: Fights ISIS," *PROCEEDINGS*, Vol. 142, No. 4(April 2016), p.50.

33) Pierre Tran, "France Deploys About 20 Aircraft to Enforce Libya No-Fly Zone," *Defense News*, March 19, 2011, <http://www.defensenews.com>(검색일: 2016. 4.14). Guenet(2016), p.50.

34) Wertheim(2016), p.55.

35) Guenet(2016), p.50.

프랑스는 ‘비용 vs. 효과’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효과와 효율성 증시정책은 국가조직 편성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해군은 ‘민관군’에서 ‘관군’을 역할을 함께 한다. 바다의 이익을 지키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바다와 관련한 관과 군의 조직을 통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3개의 통합 해역사령부-북해, 대서양, 지중해 사령부-를 두고, 지휘관으로 해군장성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해역의 해군지휘관은 적군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군의 고유 임무뿐만 아니라 불법이민자 단속, 해양 세관업무, 어업질서 확립, 구조 등의 다양한 임무를 군뿐만 아니라 관청과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구조임무소요 발생시 1명의 지휘관하에 해군 및 해경 합정 전 세력을 운용하여 체계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조직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에 기반한 정책이 항모 운용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현재 프랑스는 경제력 수준 및 임무소요를 고려 ‘비용 vs. 효과’ 측면에서 항모를 가장 잘 운용하는 유럽국가라 할 수 있다.

4. 일본(PM I → PM II)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최강의 항모전력을 보유한 국가였는데 항모의 진가는 1941년 진주만 공습에서 크게 발휘되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라는 위상과 산업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구축한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내 역량을 국외공세로 전환하며 일본 밖에서 수많은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국가위상과 임무소요 측면에서 일본제국 패망직전까지 일본은 ‘PM I’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였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은 약 20여 척의 항모를 운용할 정도로 항모선진국이었다. 패망 후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평화헌법에 따라 일본은 항모 보유를 꺼려왔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았다. 해상자위대는 19,000톤급 헬기항모인 JMSDF *Hyuga*(DDH-181)/휴가함 및 JMSDF *Ise*(DDH-182)/이세함을 각각 2009년 및 2011년에 확보하였다.³⁶⁾ 이 함정은 헬기 4대 운용이 가능하며 최대 11대의 항공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은 경항모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27,000톤급 헬기항모인 JMSDF *Izumo*(DDH-183)/이즈모함을

36) 휴가함의 경하톤수는 13,000톤이며 만재톤수는 19,000톤이다. “DDH-161 *Hyuga*/16DDH ‘13,500’ ton Class,” <http://www.globalsecurity.org>(검색일: 2016.4.14).

2015년 취역시켰다. 이즈모함은 7대의 대잠헬기 및 수색/공격헬기 운용이 가능하며 최대 14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함정으로 명실상부한 경항모급 함정이다. 나아가 일본은 후속함인 JMSDF *Kaga*(DDH-184)/카가함을 2015년 진수 시킨 후 현재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이즈모급 함정은 F-35B와 같은 V/STOL 함재기 운용이 가능하기에 항공기만 확보하면 경항모로 즉각적인 작전 운용이 가능하다.³⁷⁾

그러면 현재 일본의 항모 확보조건을 유형이론의 틀로 살펴보자. ‘P변수’ 측면에서 국가위상을 살펴보면 일본은 G7 회원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지위에 있다. 아시아에서는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힘을 가진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항모보유에 대한 추동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고의 동맹으로 유럽에 영국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일본이 있는 셈이다.³⁸⁾ 이러한 위상은 일본이 항모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경제력을 살펴보자. 2014년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약 36,000불로 OECD 평균(39,000불)에 약간 못 미치고 항모 보유국인 이탈리아(약 35,000불)보다는 약간 높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명목기준 GDP 전체에서 보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항모구축의 물질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M변수’로 분석해보면 먼저 일본은 주권에 대한 직접위협은 거의 없는 국가이다. 대신 주변국으로부터의 도발적 혹은 간접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핵 및 탄도탄 위협이 있고 중국으로부터 해상통제 침해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협은 일본에게 저강도 군사임무 소요를 창출시키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비해서는 탄도탄 탐지 및 요격임무가 필요하며 중국 위협에 대해서는 해상통제 및 상시 항공초계 임무가 요구된다. 특히 중형항모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항모를 절실히 요구되는 국가자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함재기까지 도입하여 항모의 작전운용이 가능하면 동아시아 안보위기 시

37) 허성필 박사와 장진오 박사는 이즈모함의 경우 함정개조 없이 F-35B의 이착함 및 격납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허성필, 장진오(2015), p.4.

38) LT Joshua Duran, “The Britain of Asia,” *PROCEEDINGS*, Vol. 141, No. 12(December 2015), pp. 46-51.

미국이 급하게 본토에 있는 항모까지 보낼 소요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임무소요 측면에서 항모 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나아가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제사회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임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목적 임무가 가능한 자산으로 항모의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국가위상/경제력 및 임무소요는 항모확보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창출시키고 있다. 물론 국력 대비 임무소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초대형 항모보다는 경항모가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2차 대전 전 범국가인 일본은 항모 확보를 위해 국내법으로 인한 제도적 한계 및 주변국의 우려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다. 따라서 정규항모가 아닌 헬기항모를 추진하여 왔고 앞서 언급한 이즈모함이 바로 그 사례이다. 이 함정은 2차대전 후 일본이 건조한 가장 큰 해군함정으로 기록되고 있다.³⁹⁾

5. 터키(PM IV → PM II)

터키는 항모 보유국가는 아니지만 확보 추진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무대 역할 증대에 힘입어 터키도 항모를 국가이익의 보장 균형전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강대국 수준의 항모를 확보한다면 이는 불균형 전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경항모를 추진하고 있다. 터키는 경항모 1번함을 LPD *Anadolu*함이라 명명하고 2016년 6월 건조에 착수하여 2021년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LPD *Anadolu*함은 배수량 27,000톤급으로 단거리 수직 이착륙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스키점프대를 설치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⁴⁰⁾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터키는 ‘PM IV’에서 ‘PM II’의 변화되고 있는 국가이다. 우선 국가위상 측면에서 터키는 13세기 말 건국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역사를 가진 국가로 현재 G20 회원국이자 OECD에도 가입된 국가이다. 지중해 국가 중에서 군사강국으로 분류된다.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는 터키를 세계 8위의 군사대국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⁴¹⁾ 최

39) Wertheim(2016), p.53.

40) Jane's Navy International, February 1, 2016, <http://www.janes.com>(검색일: 2016.4.14).

41) 글로벌 파이어파워(GFP) 홈페이지, <http://www.globalfirepower.com>(검색일: 2016.4.20).

근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으로부터 탈출한 난민의 처리에 있어 EU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시리아의 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중에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잘 정착되어 서구사회와도 정책적 조화를 잘 이룬다. 물론 유럽국가 그리고 한국보다도 국가위상은 낮지만 중견국가로서 점점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터키의 경제력은 유럽과 같은 부국이라 보기 힘들다. 2014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19,000달러로 멕시코의 GDP(약 18,000불)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하지만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경제는 대폭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국가이다. 과거 터키는 국가위상이나 경제력 모두에서 약소국이자 빈국이었지만 서서히 부국으로의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당장 항모 보유는 필요조건으로 성립되기 어렵지만 2020년대 중반 혹은 2030년 중반 이후를 내다보며 항모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고 이를 전력기획에 담아 정책화를 추진하는 국가가 터키이다.

‘M변수’ 측면에서 보면 터키는 지리적으로 중동국가와 가장 근접하면서도 직접적 주권위협이 가장 적은 국가이다. 대부분의 위협은 쿠르드족 자치문제와 같은 내부분제이거나 난민과 관련된 위협이다. 따라서 군사임무도 고강도가 아닌 저강도 위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중해를 접하는 관문위치에 있고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접하는 요충지에 있어 안보관련 임무소요도 지속 창출되고 있다. 또한 국가위상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터키군의 이라크 임무 참여 등에서 보듯 공동안보 임무도 부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경제 규모 및 임무소요 고려 터키에게는 중형 이상의 항모보다는 경항모가 적합하고 확보시기도 현재보다는 가까운 미래가 더 적절할 것이다. 터키는 가까운 미래에 항모를 운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군사전략과 전력기획에 이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항모 확보 계획을 이미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터키는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진단하여 전력기획을 추진하는 항모추진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Ⅳ. 사례추적 2 : 불균형 전력속성의 항모 보유 국가

1. 인도(PM Ⅲ)

인도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견제를 염두에 두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모 보유를 고수하여 왔다.⁴²⁾ 인도는 건조 중이던 영국 항모를 1957년에 구입하여 INS *Vikrant*(비크란트함)으로 함명을 부여한 후 1961년부터 운용하였다. 이 항모는 미국이나 영국의 항모와 같은 큰 활약없이 노후로 인한 도태시기 도래로 1997년 퇴역했다. 또한 인도는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운용했던 30,000톤급 시 헤리어에 기반한 HMS *Hermes*(헤르메스함)-STOVL형⁴³⁾을 구입하여 INS *Viraat*(비라트함)으로 함명을 변경하여 1987년에 작전배치하였다. 건조된 지 거의 60년이 된 이 항모는 2016년 2월 12일 마지막 항해를 하고 퇴역하여 고급호텔로 개조 중에 있다.⁴⁴⁾ 최근에도 인도는 국민경제의 열악함과 빈약한 경제인프라에도 불구하고 항모 획득 및 운용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는 냉전시절 소련이 운용했던 45,000톤급(V/STOL형)⁴⁵⁾ 항모를 도입하여 INS *Vikramaditya*(비크라마디티야함)으로 함명을 부여한 후 2014년 작전배치하였다.

한편 중국의 대국화가 진행되면서 해양통제력 확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인도는 현 보유 항모보다 진일보한 항모 획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인도는 외국에서 도입한 항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2척의 국내 건조 항모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⁴⁶⁾ 1번함인 40,000톤급 핵추진 항모인 INS *Vikrant*(비크란트함)-STOVAR형⁴⁷⁾은 18년경, 12번함인 INS *Vishal*(비살함)-CATOVAR형은 2025년 이후 취역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⁴⁸⁾ 현재 인도는 10대의 시 헤리어

42) 최근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항모 등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김주환, “중국 해양 진출에 걱정하는 인도 항공모함 등 군사력 증강으로 대응,” 『Chindia Plus』 September 2015, pp.60-61 참고.

43) STOVL: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단거리 발진, 수직착함).

44) Sam LaGrone, “Indian Carrier INS Viraat Sets Sail for Final Journey Before Conversion Into Luxury Hotel,” <http://www.news.usni.org>(검색일: 2016.2.16).

45) V/STOL: Vertical/Short Take-off and Landing(수직/단거리 이착함).

46) Asia-Pacific Rebalance 2025, CSIS, January 2016, p.86.

47) STOVAR: Shor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단거리 발진, 구속착함).

48) 2번째 핵추진 항모인 비살함은 65,000톤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치되면 인도 역사상 가장 큰

(Sea Harrier)기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형항모 건조와 병행하여 45대의 미그-29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⁹⁾

‘PM 분석’ 중 먼저 ‘P 변수’를 살펴보면 인도의 국가위상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Indo-Asia-Pacific’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인도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인도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인도의 최신 항모건조에는 미해군의 착함 관련 기술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인도와의 공조가 절실한 전략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중국 견제능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듯 인도는 2016년 2월 4~8일간 중국의 관심해역이 접하고 있는 인도양에서 50개국 이상의 해군을 초청하여 국제관함식을 개최하였다.⁵⁰⁾ 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는 위상이 높을지 몰라도 인도는 삶의 질 측면에서 빈국으로서의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쉬운 예로 인도의 도시는 쓰레기와 폐기물이 나뒹굴 정도로 인프라가 엉망이다.

경제력을 보면 인도 일반국민이 얼마나 피폐한지 쉽게 알 수 있다. 30,000톤급 항모인 INS *Viraat*함을 핵심전력으로 운용하던 2000년대 인도는 극심한 빈국이었다. 2004년 기준 인도의 1인당 GDP는 약 2,500달러로 멕시코의 GDP(10,000불)의 1/4에 불과하였다. 국산항모 추진을 진지하게 검토하던 2009년에도 GDP는 약 4,100불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인도의 항모 운용 및 차기항모 추진은 극심한 불균형 국가자산만을 짊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의 경제, 특히 민생경제 및 사회인프라를 고려하면 항모라는 전력은 국가를 지속 발전시키는 자산으로 기능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 12억 인구의 20% 이상이 극빈층으로 살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도인은 약 2천 5백만 명에 달했다.⁵¹⁾ 인도에는 아직도 전기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인도 북동부의 비하르(Bihar)주에는 64%의 사람들-약 6천 4백만 명-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⁵²⁾ 취약한 민생인프라를 보면 인도를 국제무대에서 부상하는 국가로 보는

해군함정이 될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 “인도 해군, 항공모함 2번째 자체건조 결정,” 『GLOBAL DEFENSE NEWS』 제1188호(2015.5.19), p.5.

49) Wertheim(2016), p.52.

50) 15년 전 개최된 관함식은 중국과 더 멀리 떨어진 인도의 서부해안에서 개최하였다. “Asian nuclear weapons: What lurks beneath,” *The Economist*, February 6, 2016, p.24.

51) 세계은행 data, <http://www.worldbank.org>(검색일: 2016.4.14).

국제정치적 시각이 다소 과대포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⁵³⁾

인도는 ‘M 변수’ 측면에서 항모를 필요로 하는 위협이나 임무소요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와 중국은 서로 주권을 위협하는 관계는 아니나 경쟁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핵무기를 만들어 대결할 정도로 심각한 적국관계였다. 최근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고 있으나 지속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무측면에서 인도의 항모 운용은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는 경제력과 국가위상을 고려한 전력기획에는 실패하였다. 국가경제력이 부족한 가운데 안보이익만을 내세운 전력기획으로 지속적인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어 전력의 완전성이 떨어지고 작전효과도 저하된 결과 항모가 균형적인 국가자산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INS *Vikrant*(비크란트함)이 작전에 투입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항공바지रो만 운용되는 가운데 퇴역연기를 위한 개조만 수차례 진행되어 예산이 낭비되었고 2016년 중반부터는 퇴역수순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국산항모 건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65,000톤급 핵추진 항모가 인도에게 유효한 국가모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도가 항모에 투자할 국가재원을 경제력 부양 및 민생경제에 투자했다면 빈국이라는 처지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기회를 찾았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도는 무리하게 항모를 보유한 대표적인 전력기획의 실패사례라 할 수 있다.

2. 태국(PM IV)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항모를 보유한 국가이다. 스페인에서 건조된 태국의 HTMS *Chakri Naruebet*(차크리함)은 11,000톤급 경항모로 1997년 취역하였다. 시 헤리어 6대 및 회전익 항공기 4대를 수용할 수 있는 함정으로 과거 스페인 운용했던 항모의 절반크기의 함정이다. 차크리함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항모로 분류되고 있다. 차크리함 도입시 항모기능 확보를 위해 노후된 시 헤리어 9대를 도입하고 해군함재기 조종사까지 양성하였으나 얼마 사용하

52) “Ending energy poverty: Power to the powerless,” *The Economist*, February 27, 2016, p.49.

53) 인도가 중국을 능가하는 최고속 경제성장국이라는 평가가 다소 왜곡되었다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관련 글은 “India’s GDP data: The elephant in the stats,” *The Economist*, April 9, 2016, p.63 참고.

지 못하고 기능이 퇴화되어 현재는 행사 및 회의용 행정모함으로 전락했다.

태국의 항모 확보는 앞서 제시한 유형이론의 'PM IV'에 해당한다. 태국의 국가위상은 아시아의 약소국이며 경제적으로도 빈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5년 태국의 1인당 GDP는 약 5,500달러로 세계 91위이다.⁵⁴⁾ 항모를 취역한 1990년대 중반 태국의 빈곤율은 더 극심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의하면 당시 태국 인구의 약 14%인 8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3.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다. 빈곤경제로 인해 도시교통 인프라도 낙후되어 매년 약 24,000명이 교통사고로 도로에서 사망하는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⁵⁵⁾

태국은 직접적 국가위협이나 고강도의 군사임무 소요도 없었다. 항모 도입 당시 임무는 상륙작전 지원, 태국해안 전력투사, 해상초계로 부여되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임무완전성 구비를 위한 재정지원이 원활치 않자 차크리함은 재해·재난작전을 주임무로 상정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항모다운 작전운용은 없었고 최근 운용의 예로 2011년에는 태국 남부 홍수시 구호작전을 들 수 있다. 항모는 강력한 타격자산이다. 재해·재난작전은 항모를 다목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싸타힙(Sattahip) 기지에 배치된 차크리함은 임무가 불명확하며 운용항공기도 없어 현재도 한 달에 2~3일 정도 시험항해만 하는 행정모함으로 퇴화되었다. 더욱이 항모운용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력도 부재하여 신규함재기 도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치밀하지 못한 항모 도입과 같은 국가재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태국은 빈국의 늪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장기 경제침체에 들어갔다. 태국은 이와 같은 전력기획 및 운용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차크리 후속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3. 이탈리아(PM II → PM IV)

이탈리아는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여전히 항모 2척을 운용하는 국가이다. 최초의 항모는 1985년 취역한 14,000톤급 *Giuseppe Garibaldi*(주

54) IMF data, <http://www.imf.org>(검색일: 2016.4.14).

55) "Thailand's deadly roads: Look both ways," *The Economist*, April 16, 2016, p.23.

제폐 가리발리함)으로 V/STOL에 기반한 경항모이다. 이 항모에는 AV-8B 헤리어 II와 대잠헬기 등 최대 18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두 번째 항모는 27,000톤급 *Cavour*(카불함)으로 2008년에 취역하였다. 1번 항모처럼 V/STOL에 기반한 경항모인 카불함은 AV-8B 헤리어 II와 대잠헬기 등 20여 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다. 특히 카불함은 상륙함과 구축함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토록 센서 및 무장이 구비되어 다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이탈리아의 항모 확보조건은 'PM II' 유형에 해당되었지만, 머지않아 'PM IV'로 하락될 가능성도 있는 국가이다. 우선 국가위상을 살펴보면 우선 이탈리아는 OECD 회원국이다. 또한 이탈리아는 영국이나 프랑스 수준의 유럽 주도 국가는 아니지만 G7 회원국이다. 따라서 국제 주요문제를 논의하는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력은 이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 경제침체 문제는 전 유럽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제력은 좀 더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첫 번째 항모를 취역한 1985년 당시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13,000불로 영국의 GDP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5년 기준 GDP는 약 36,000불로 영국의 GDP(약 41,000달러)보다 뒤쳐져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심한 경기침체에 있고 국가 신용등급도 지속 하락하고 있어 이탈리아의 경제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제2의 그리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국가경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1980~2000년대에 항모는 국가위상과 경제력에 걸맞는 균형적 국가자산이었지만 현재는 항모가 이러한 지위를 조금씩 잃어 가고 있다.

위협·임무 측면에서 본다면 상기에서 본 것처럼 'P변수'는 변화되었지만 'M변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탈리아가 직면하는 위협과 임무소요 수준은 1980~2000년대와 현재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시 추축국으로 전쟁에 참가한 국가였지만 전후 냉전체제하에서 국가행위자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은 없었다. 현재도 주권적 위협은 거의 없는 국가 중 하나로 다른 유럽국가와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는 수준의 위협이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국가위상을 고려하면 국제사회로부터 공동안보 임무를 받아왔다. 1999년 코소보 사태 시는 가리발리함을 발칸반도 해역으로 파견하여 헤리어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2001~2002년에는 '항구적 자유작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인근 해역으로 항모가 파견되어 이탈리아 해군의 지휘기함, 해상항공지원 및 항공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2011년 리비아 사태시는 NATO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공대지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⁵⁶⁾

경제력과 임무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탈리아의 경항모 2척은 아직 균형적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조금씩 'PM IV' 유형으로 움직여 항모가 국가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불균형 전력으로 퇴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항모 운용 국가로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차기 항모 확보 검토보다는 현 경항모 2척을 최대한 오래 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현재 노후된 헤리어 II 전투기를 F-35B로 교체하고 이를 위해 카블함의 개조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체 및 개조시점에 대한 결정은 국가경제 수준과 임무소요를 지속적으로 진단하며 이루어져야 항모가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기능할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4. 러시아(PM I → PM III → PM II/IV)

냉전 중반까지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은 경제력과 임무소요 모두에서 항모확보조건을 충족시키는 'PM I'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였다. 구소련은 양극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 국가에 대적하기 위해 1955년 창설된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이끈 국가였다.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구권 국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냉전기 구소련의 입장에서 미국을 대적해야 했기에 위협강도도 높았고 전 세계안보에 관여하는 위치에도 있었기에 임무도 다양했다. 이런 환경하에 항모는 균형적 국가자산으로 기능하며 양극체제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데 기여했다. 냉전기간 중 *Moskva*(모스크바)급 2척-*Moskva*, *Leningrad*-과 *Kiev*(키에프)급 4척-*Kiev*, *Minsk*, *Novorossiysk*, *Admiral Gorshkov*-등 구소련은 총 6척의 항모를 건조하여 운용하였다. 모스크바함은 15,000톤으로 14대의 헬기탑재가 가능한 헬기항모였다. 키에프함은 Yak-38 전투기를 포함하여 32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40,000톤급 V/STOL형 항모였다.

하지만 소련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내적 성장이 침체된 가운데 과도하

56) Tom Kington, "Italy gives bombing stats for Libya Campaign," Defense News, 2011.12.14, <http://www.defensenews.com>(검색일: 2016.4.22).

게 외적 팽창(imperial overstretch)을 추진한 결과 국가재원이 바닥나게 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이때부터 임무소요는 변함이 없지만 국가위상은 낮아지고 경제력은 서서히 빈국화되는 ‘PM III’ 유형으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관성적 전력기획을 지속하여 80,000톤급 원자력항모인 *Ulyanovsk*(우라노프스크함) 건조를 추진한다. 이 항모는 미국의 초대형 항모에 필적할 수 있는 작전운용성능(ROC)을 기반으로 1988년에 건조를 시작하지만 국가재정 부족으로 1991년 소련 붕괴 직전 건조가 중단되고 1992년에는 해체수순에 들어간다. 결국 구소련은 항공바지 수준의 운명을 갖게 될 함정을 치밀한 판단없이 관성적으로 건조한 셈이다. 우라노프스크함은 항모가 불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전략한 잘못된 전력기획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항모는 1982년 건조가 시작되어 1990년에 취역한 *Admiral Kuznetsov*(에드미럴 쿠즈네초프함)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항모도 소련 붕괴 후 국가혼란에 빠져 있던 러시아가 감당하기 힘든 자산이었기에 작전배치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1995년부터 작전배치된 에드미럴 쿠즈네초프함은 스키점프대를 장착한 6만 톤급 STOBAR 기반 중형항모로서 약 40여 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 현 주력전투기로 Su-33 및 MIG-29K를 운용하고 있다.

에드미럴 쿠즈네초프함이 작전배치된 1995년 러시아의 1인당 GDP는 약 5,600달러로 멕시코의 7,400달러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처럼 무너진 국가경제에도 불구하고 항모 미포기 정책을 통해 한 척 보유를 고수하게 된다. 국가위상과 경제력이라는 변수는 바뀌었지만 위협과 임무라는 변수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러시아에게 유럽은 여전히 위협이었고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여전히 필요한 임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러시아의 항모확보조건은 ‘PM III’ 유형에 해당되었다. 경제성장이 급한 상황에서 러시아 항모의 활약은 기대할 수 없었다. 1995년 작전배치 후 약 90일간 지중해 항해를 한 후 2000년대 말까지 큰 활약없이 북해함대 내에 정박하며 수리 및 정비를 하는 항공바지 수준으로 전략하게 된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집권하에 러시아의 국가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최근 러시아는 소련시절과 같은 강대국으로의 위상회복을 목표로 내세우며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하에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⁵⁷⁾ 또한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시리아 내전 참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더욱 강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⁵⁸⁾ 경제력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러시아의 GDP는 약 21,000불로 멕시코의 GDP(약 17,000불)보다 높은 경제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한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동원하여 크림반도를 합병하며 유럽으로의 서진을 개시하였다. 나아가 미국의 국제사회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⁵⁹⁾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이 남중국에서 ‘신냉전 구도’를 창출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미국과의 대치가 격해지고 있다.⁶⁰⁾ 심지어 러시아는 군무기를 동원해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위세를 강화하고 있다.⁶¹⁾ 2016년 4월 12일 러시아는 Su-24 전투기를 발진시켜 발트해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USS *Donald Cook*(DDG-75)함을 근접비행하며 위협했다.⁶²⁾ 하지만 현재 러시아에게 미국은 냉전시절 위협강도와는 거리가 멀다. 국가적 수준의 직접위협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임무는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는 전쟁과 같은 고강도 임무보다는 러시아도 목소리를 내는 수준의 임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에 상충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구조적 지위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위상은 강국으로 경제력은 조금씩 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저강도 임무소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러시아는 항모확보조건에서 ‘PM II’ 유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러시아의 항모 운용에 탄력을 주고 있다. 소련 말기 항모가 불균형 전력으로 기능했다면 현재의 러시아에게는 균형전력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는 냉전 이후에도 이 항모를 틈틈이 지중해에 파견하여 러시아의 존재를 과시하는 데 활용하여 왔다.⁶³⁾ 시리아 내전 초

57) 러시아인들의 대군신뢰도는 1996년 40%에서 2015년 85%로 대폭 향상되었다. “Briefing Russia’s wars,” *The Economist*, March 19, 2016, p.9.

58) “Briefing Russia’s wars,” *The Economist*, March 19, 2016, pp.18-20.

59)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협력의 강화는 ‘해상연합 2015’에서 보듯이 양국 간의 해군협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고상두, “러시아와 중국의 지중해 군사훈련,” 『안보현안분석』 Vol. 107(2015.5.30), pp.1-4.

60) “中과 손잡는 러... 남중국해도 ‘신냉전 구도,’” 『동아일보』 (2016.4.21), p.24 ; “‘신냉전’ 물밑서도 불붙었다,” 『국민일보』 (2016.5.10), p.10.

61)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적 행동은 자신의 앞마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Captain Tuan Pham, “A South China Sea Game Changer,” *PROCEEDINGS*, Vol. 142, No. 4(April 2016), p.59.

62) USNI News, “Russian Flyby of USS Donald Cook Highlights International Tension in the Baltics,” 2016.4.15, <http://news.usni.org>(검색일: 2016.4.19).

63) Norman Polmar, “Putin’s ‘Fleet in Being,’” *PROCEEDINGS*, Vol. 141, No. 12(December

기인 2011년 쿠즈네초프함은 대서양과 지중해로 파견되어 현시작전을 수행했다. 또한 2016년 중반부터 지중해에 배치되어 러시아 함대를 이끌며 시리아 사태해결의 전면에 나설 계획이다.⁶⁴⁾

이 작전을 마친 후 2016년 말부터 쿠즈네초프함은 신형전투기 탑재가 가능토록 약 2년간 개조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모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모 한 척 체제의 최대 단점이 수리 및 정비 시 전력공백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신장되고 있는 국가위상에 걸맞도록 신형항모 확보를 추진 중이다. 특히 러시아는 10만 톤 핵추진 항모 4척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모강국으로의 등극 가능성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 러시아의 경제력과 임무수준을 고려하면 대형항모는 불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현 경제력과 임무소요 수준에서 바로 항모를 추가 확보한다면 냉전말기 구소련처럼 ‘PM IV’ 유형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기획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력 성장 추이 및 임무소요 증가 여부를 판단하여 신형항모 추진에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푸틴 집권 1, 2기였던 2000~2008년과 달리 집권 3기인 현 러시아의 경제력은 성장세가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국가경제는 2015년 비해서 4%나 줄어들었다.⁶⁵⁾ 따라서 면밀한 검토없이 관성적으로 전력건설을 추진하면 냉전말기처럼 항모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항모위상은 균형과 불균형이라는 양면을 모두 품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항모가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균형적 자산이 되려면 국가성장과 임무소요를 지속적으로 진단하면서 대형항모 확보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대형항모가 국가전체적 측면에서 순기능을 저해하는 플랫폼으로 인식되면 과감히 중형항모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항모를 균형적 자산으로 기능케 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것이다.

2015), pp.86-87.

64) 문예성, “러시아, 올 연말부터 최대 2년반 항모전력 공백 예상,” 『NEWSIS』 (2016.3.7) <http://www.newsis.com>(검색일: 2016.4.15).

65) “Briefing Russia’s wars,” *The Economist*, March 19, 2016, p.18.

V. 결론 :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항모 확보 및 운용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부 국가는 관성적인 전력기획과 국가전체의 시각이 아닌 협소한 시각으로 항모를 무리하게 확보하여 국가 골치덩어리가 되게 하는 실수를 범했다. 반면 어느 국가는 항모를 국가자산으로 잘 운용하여 국가이익을 견인했다. 이런 결과는 항모를 국가이익 수호의 핵심동력으로 삼았던 국가에게 이 전력이 없었다면 전략적 재앙에 직면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사례추적은 미래전략수립과 전력기획 방향 측면에서 한국에게 어떠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가? 한국은 항모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에 위치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은 본 분석에서 제시한 ‘PM 유형’ 이론에서 ‘PM I’의 위치를 향해 고속향해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PM III’의 위치에 있었던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PM I’의 위치로 이동을 시작한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 미국과 같은 초대형 항모가 아닌 한국형 항모-경항모 혹은 중형항모-를 확보하는 것으로 상정하면 이미 ‘PM I’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이다. 현재 최소한 경항모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위치라는 의미이다. 현재도 한국이 항모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30년 후마저 항모가 없다면 국가이익이나 전략이익 수호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항모 확보를 추진해서도 안 된다. 앞선 살펴본 사례와 같은 전력기획의 실패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PM 유형’ 분석을 통해 한국의 항모확보조건을 판단해보자. 과거 한국에게 항모는 임무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국가위상이나 경제력 측면에서는 감당해내기 힘든 불균형적 국가자산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중견국이자 OECD 및 G20 회원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UN의 일원으로 해외에 파병도 하는 원조국이 된 것이다.

군사력 수준도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다.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는 한국의 군사력을 10위권 내외로 평가해왔다. 2015년에는 7위로 평가하였고 2016년에는 다소 낮은 11위로 평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10위권 이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항모를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를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⁶⁶⁾ 이들 국가 중에는 한국보다 위협강도나 임무수준이 훨씬 낮은 항모보유국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력 및 임무소요에서 한국에 많이 못 미치는 터키도 미래를 위해 항모 확보를 정책화하여 추진 중이다. 이런 메커니즘에서 보면 한국의 전력기획이 균형감을 잃은 것은 아닌지 미래환경에 부합한 전략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지 면밀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가성장, 경제력 성장, 군사력 규모에 대칭한 해상전력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한국형 항모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막연히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시점인 것이다.

또한 한국은 경제력도 세계 10위 수준까지 등극했다. IMF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전체 GDP는 약 1조 4천 억불로 세계 11위이다. OECD에서 분석한 GDP 수치에 의하면 2014년 기준 1인당 시장가격 기반 GDP는 33,000불로 영국의 GDP 40,000불을 근접추격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가위상과 경제수준도 높아진 현재도 항모 보유 미검토라는 인식적 관성이 계속된다면 냉철한 전략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M변수’ 측면에서는 항모 보유에 대한 필요조건을 더욱 충족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되어있고 임무도 다양한 국가이다. 항모는 국가이익 보장의 교두보 역할이 가능한 국가전력이다. 북한이라는 주권적 위협 국가가 코앞에 있으며 이런 위협을 주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최적의 전력이 항모다. 항모는 북한과의 전면전시 북한지역에 대한 본토타격과 공군의 제공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효한 합동전력이다. 항모는 이동가능한 항공기지라는 기동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효과적 작전이 가능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게 해주는 동력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은 주변국으로부터 해양통제 침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한국이 보호해야 할 독도와 이어도는 주권에 해당하는 핵심이익이다. 특히 한·중·일 삼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위치한 이어도를 수호하는 데 항모는 유효한 기반적 플랫폼이 되어 줄 수 있다.⁶⁷⁾ 인근 해역에 상시 배치된 가운데 해상통제와 바다 위의 제공권 확보라는 두 가지 작전을 동시에 수행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의 해상 혹은 해상 위의 상공에 대한

66) 군사력 1~10위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일본, 터키, 독일, 이탈리아이다. <http://www.globalfirepower.com>(검색일: 2016.4.14)

67)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김경희,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미·중의 태평양 전략과 국회의 대응방안,” 『2014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참고.

침해를 지속성있게 견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항모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⁶⁸⁾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의 정찰기와 이를 호위하는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공군기를 적극 지원하여 완전성 있는 공해 합동작전을 하는 데 항모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변국 정찰기의 KADIZ 내 활동시간이 장기화될 시 지상에서 발진한 공군기는 제한된 연료로 인해 작전시간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공백을 메우는 방편으로 항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공군기를 근접지원한다면 KADIZ 사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항모는 전면전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국지적 위협도 견제할 수 있는 합동자산인 것이다.⁶⁹⁾

나아가 한국은 국가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공동안보임무 참여를 더욱 요구받고 있다. 청해부대는 한국의 상선을 보호하여 한국의 경제이익을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세계가 사용하는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공동의 이익수호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안보의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테러분자와 같은 비국가행위자 위협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해상난민 문제 나아가 재해·재난구호 등 다양한 임무를 거부할 수 없는 국가가 되고 있다. 해외로 나아가는 통로는 바다이고 이 임무전장에서 다목적으로 운용가능한 함정이 항모이다.

이처럼 한국은 항모확보조건이 필요충분조건을 이미 갖춘 국가이다.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이 신장되고 있으며 어느 국가보다도 다양한 안보위협과 임무가 내재된 한국이 항모 확보에 대한 본격적 고민과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 혹은 정책에 핵심동력이 빠진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위 국가급 주력함 없이 기존의 중·소형 함정으로 연안 및 NLL 주변 적과의 소규모 전투위주의 전술적 임무만 지속하는 관성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공세적 항모 운용으로 전면전시 전쟁을 주도하는 능력을 현시함으로써 한반도 위기시마다 타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만을 요구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해야 한다. 결국 이와 같은 항모 운용은 전쟁억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가주력함인 항모 확보를 통해 한국의 이익이 국제사회의 이익과 연결되는데 활용될 수 있다.

68) 중국과 일본의 견제를 위해서도 한국의 항모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은 윤석준, “해군의 항공모함 확보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독도연구저널』, 2009 Summer 및 허성필, 장진오(2015) 참고.

69) 한국의 항모 운용의 유효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반길주, 『국제현실정치의 바다전략: 해양 접근전략과 균형적 해양투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pp.544-546 참고.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안보 역할이 대폭 증대된 강건한 중견국이며 20~30년 후에는 세계 핵심강국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변변한 항모 한 척도 없다면 국제무대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며 한반도 내의 주권적 위협발생시 혹은 전쟁위기시 주도적으로 작전수행하는 능력도 부재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결국 국가는 성장했지만 이를 지탱할 물리적 기반이 취약해지는 셈이다. 위상이 강해진 국가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중·소형함만 보유하고 국가주력함으로서의 항모가 없다는 것은 국가위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 전력구조에 봉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30년 후에 뒤늦게 깨닫고 항모 확보를 추진하면 주도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이익을 지킬 자산없이 30년을 ‘이가 아닌 잇몸’으로 버티는 꼴이 될 것이며 결국 버티지 못하고 국가이익이 조금씩 침해를 받으며 국가위상이 퇴보하는 불운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추지하다시피 항모 확보조건 유형이론을 적용하면 한국은 ‘PM I’ 유형의 국가이다. 현재도 한국의 국가위상과 경제력은 기존 항모 보유국가의 수준이지만 앞으로 30년 후를 판단하면 그 역량은 배가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국이 처한 위협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무는 기존 항모보유국가보다 더 강하고 다양하다. 경제력 혹은 국가위상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한국보다 임무소요가 훨씬 적은 영국, 프랑스도 항모를 운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PM II’에 해당하는 국가도 항모를 국가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PM I’ 유형의 국가인 한국이 항모 미보유를 고수한다면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다. 보유여부가 아니라 보유유형-크기 및 척수-이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균형적 국가모함으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 너무 과도한 전력건설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위상, 경제력, 위협 및 임무 그리고 타항모 보유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40,000~60,000톤급 항모 2~3척이 유효한 전력으로 판단된다. 항모 건조 템포를 조절하고 시행착오를 없애며 상황에 따른 투입전력을 차별화하기 위해 경항모 1척을 먼저 전력화 한 후 중형항모 1척을 건조하는 2척 체제 전력기획도 방법 중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항모 추진 성공국가의 공통적 속성을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한국의 항모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우선 한국은 현 항모 보유 국가에 뒤지지 않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항모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이익을 견인차로서 활용한 대부분의 국가는 OECD 회원국으로 경제적 부국이였다. 물론 중국은 OECD

국가는 아니지만 경제대국이다. 한국은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었고 현재 10대 경제대국으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항모를 보유하지 않은 세계 주도국가는 없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주도국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항모가 없다면 이런 진화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셋째, 삼면이 바다라는 한국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항모진출로는 섬국가인 영국 수준이고, 전면전 위협에서 세계 공동안보까지 다루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임무강도는 미국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지하다시피 주변국들이 모두 항모로 무장하고 있어 항모가 없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극심한 전력 불균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력기획은 30년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 즉, 30년 후 한국의 경제력과 위상 그리고 임무소요를 예측하여 전력소요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항모가 절실한 시점이 도달한 후 확보하려면 때 늦은 후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한국이 경항모 수준의 전력은 보유할 충분한 조건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모 확보에 관한 검토를 당장 착수해도 빠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조건과 환경이 달라진 현재 그리고 더 변모하게 될 미래를 판단하지 못하고 트랩에 갇힌 채 항모 확보 검토 불필요에 대한 인식적 관성이 고수된다면 냉철한 현실전략을 내놓지 못하게 되어 국가이익 수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국가미래를 위해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항모를 억지로 돌려보내는 우를 범하지 말자.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학술저널

- 고상두, “러시아와 중국의 지중해 군사훈련,” 『안보현안분석』, Vol. 107(2015. 5.30).
- 김경희,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미·중의 태평양 전략과 국회의 대응방안,” 『2014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 김주환, “중국 해양 진출에 걱정하는 인도 항공모함 등 군사력 증강으로 대응,” 『Chindia Plus』 September 2015.
- 박병광,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에 대한 소고: 지정학과 군사과학기술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7권 제4호(2011년 겨울).
- 박성용, “전간기 영국, 미국, 일본의 항공모함 발전에 관한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7권(2011년 8월), pp.171-201.
- 반길주, 『국제현실정치의 바다전략: 해양접근전략과 균형적 해양투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 정철호, “중국, 국력 신장 위해 태평양 진출,” 『Chindia Journal』 2015. 7.
- 윤석준, “해군의 항공모함 확보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독도연구저널』 (2009 Summer).
- 이홍표 편저, 『중국의 해양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 허성필, 장진오,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확보 현황 및 전망,” 『주간국방논단』, 제 1564호(2015).
- 홍현수, “영국의 Queen Elizabeth급 항공모함,” 『국방과학기술정보』 통권 47호(2014년). *Asia-Pacific Rebalance 2025*, CSIS, January 2016.
- Captain Tuan Pham, “A South China Sea Game Changer,” *PROCEEDINGS*, Vol. 142, No. 4(April 2016).
- Eric Wertheim, “World navies in review,” *PROCEEDINGS*, Vol. 142, No. 3(March 2016).
- Francois Guenet, “Charles de Gaulle: Fights ISIS,” *PROCEEDINGS*, Vol. 142, No. 4(April 2016).
- Jane’s Defense Weekly*, January 29, 2016.
- Jane’s Navy International*, February 1, 2016.
- J.G. Barlow 저, 윤영식 제독(옮김), 『제독들의 반란: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군항공을 위한 투쟁』 (서울: 랜드앤마린, 2011).
- LT Joshua Duran, “The Britain of Asia’,” *PROCEEDINGS*, Vol. 141, No. 12(December 2015).
- Polmar, Norman, “Putin’s ‘Fleet in Being’,” *PROCEEDINGS*, Vol. 141, No.

12(December 2015).

The Economist, "Asian nuclear weapons: What lurks beneath," February 6, 2016.

The Economist, "Ending energy poverty: Power to the powerless," February 27, 2016.

The Economist, "India's GDP data: The elephant in the stats," April 9, 2016.

The Economist, "Thailand's deadly roads: Look both ways," April 16, 2016.

2. 정부문서 및 주간지/일간지

국방기술품질원, "인도 해군, 항공모함 2번째 자체 건조 결정," 『GLOBAL DEFENSE NEWS』, 제1188호(2015.5.19).

국방기술품질원,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Gerald R. Ford함의 비행갑판 설치 완료," 『Global Defense News』 제709호(2013.4.19), pp.5-6.

『국민일보』, 2016. 5.10.

『국민일보』, 2016. 5.12.

『동아일보』, 2016. 4.21.

『동아일보』, 2016. 5. 2.

『동아일보』, 2016. 5. 4.

『세계일보』, 2016. 2.29.

『서울신문』, 2016. 4.19.

『연합뉴스』, 2015. 2.23.

『한국경제』, 2016. 2.18.

『한국일보』, 2016. 4.25.

『NEWSIS』, 2016. 1. 5.

『NEWSIS』, 2016. 2.18.

3. 인터넷

<http://www.chogabje.com>

<http://www.defensenews.com>

<http://www.globalfirepower.com>

<http://www.globalsecurity.org>

<http://www.imf.org>

<http://www.janes.com>

<http://www.navy.mil>

<http://www.newsis.com>

<http://www.news.usni.org>

<http://www.oecd.org>

<http://www.royalnavy.mod.uk>

<http://www.worldbank.org>

<http://www.yonhapnews.co.kr>

<http://news.kbs.co.kr>

<http://news.usni.org>

Abstract

**Aircraft carriers : National ships or paper tigers?
- Conditions to acquire aircraft carriers analyzed
by tracing cases -**

Ban, Kiljoo*

Aircraft carriers: are they national platforms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or just simply paper tigers to be little useful for states' development? To some states such as U.S., U.K, and France, aircraft carriers functioned as national assets which is indispensable to their interest. By contrast, Thailand's aircraft carrier was a dead platform which is useless to its national interest and India's ones were little used on the mission field. What is the mechanism leading to this difference? The key is whether states make aircraft carriers connected to overall national evolution when it comes to establishing military strategy and planning a long-term force structure. Put it another way, conditions to acquire them need to be analyzed regarding two variables-national status (prestige and economic power) and threat (mission)-for the future as well as in the present. The former acquired carriers under the condition of making them becoming national platforms which is balanced with their overall development. However, the latter simply bought them without carefully taking account of economic obstacles, e.g., the poverty rate, when it comes to force planning. At the same time, we should not neglect to identify that states of the former cases might have a hard time in maximizing their key interests if they did not have carriers. Accordingly, conditions on carriers' acquisition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and a typological theory suggested here could shed light on this process. This theory shows that South Korea's status is eligible to have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to acquire carriers.

* Commander, The ROK Navy.

Key Words : Aircraft carriers, National prestige, Threat, Force planning,
South Korea

논문접수 : 2016년 4월 20일 | 논문심사 : 2016년 4월 26일 | 게재확정 : 2016년 4월 29일